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이기현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정치접촉, 경제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북·중 우호협력 조약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까지 북·중동맹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북한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북·중 관계는 이념적 관계라기보다는 실리적 관계의 성격이 짙었으며,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해왔다. 북·중동맹의 동학은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고려해왔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고,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과 헤게모니(Hegemony)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중국이 군사혁신과 해·공군력 강화 등을 통해 역내 이익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들이 포착되었다. 미국은 관여정책과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확대되었고,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일련의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안보프레임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정치·경제적 재보장을 시도함으로써 세력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전략의 최대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구도의 현상유지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기본 대외전략의 변화가 있거나, 동북아에서 현재의 세력균형구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실리적 이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다는 점에서 북·중동맹의 견고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 차

1. 서론
2.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북·중동맹관계의 동학
 - 가. 중·소 갈등과 북·중동맹의 동학
 - 나. 탈냉전과 북·중 가상동맹
3. 미·중 전략게임과 북한의 재발견
4. 북·중동맹은 과연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5. 정책제언

1. 서론

- 2011년 5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3번째 방중을 하면서, 북·중 우호협력조약¹⁾ 체결 50주년과 북한과 중국 간 우의를 거듭 강조한 바 있음.
-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일(7.11)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음.
 - 각 측 대사관저에서는 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연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 북한의 최영림 내각총리,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国) 국무위원 등 양국 최고위급 관료들이 참석했음.
 - 그에 더해 상호 대표단을 교환했는데, 중국에서는 장덕장(张德江) 부총리가 중국 측 단장을 맡았고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북측 대표단 단장을 맡음.
 - 조약 체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양국 차원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북한의 3대 예술단 중 하나인 평양예술단이 방중공연을, 중국 간쑤성 예술단이 방북공연을 상호 진행.
- 북한과 중국 간의 우의를 강조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는 등 밀월적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관영방송인 CCTV(China Central Television)에서 북·중 우호협력조약의 유효성이 2021년까지 연장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내언론에서는 이 조약의 유효성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속화되었음.
- 북·중 우호협력조약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이 조약이 북한과 중국 간 동맹을 규정하기 때문임. 물론 양국은 모두 공식적으로 동조약을 동맹조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나, 동 조약의 제2항에는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할 경우, 즉각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동개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성격이 짙다고 평가됨.
- 최근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정치접촉, 경제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북·중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까지 북·중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형국을 보여줌에 따라, 북·중 관계가 과거의 혈맹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중국이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게임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중국 위협론 재확산, 한중 관계 악화라는 전략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인 한국의 입장에 대한 배려 없이 여전히 북한 감싸기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임.
- 왜 중국은 북한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일까? 북·중동맹의 강화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역사적으로 북·중 관계는 이념적 관계라기보다는 실리적 관계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관계의 역사에 대한 우선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북한과의 양자관계보다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강대국(냉전시대에는 소련, 냉전 이후에는 미국)과의 외교관계(high politics)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함.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조 속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함.
- 본 분석은 상기한 두 가지 측면인 북·중동맹의 역사적 실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중국의 대외정책을 고려해서 기술토록 할 것임.

2.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북·중동맹관계의 동학

가. 중·소 갈등과 북·중동맹의 동학

- 냉전시기에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적 유대를 같이하는 동맹 파트너이자 안보상의 전략적 자산으로 북한을 인식했으며, 이러한 인식의 바탕 속에서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고 북·중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과시함.
 - 국공내전시기 중국 공산당의 동북지역 장악에 있어 조선족들의 공헌과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과의 유대관계는 북·중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했음.
 - 소련,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 사이에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중국은 1961년 북·중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더욱 실질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킴.

북·중 우호협력조약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할 경우, 즉각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동개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성격이 짙다고 평가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북한과의 양자
관계보다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강대국과의
외교관계(high
politics)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해...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조 속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해...**

- 냉전기 북·중동맹 관계는 이념적 관계라기보다는 사회주의권 내부의 노선갈등과 동아시아 강대국 구도의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해를 타진한 실리적 결과임.
- 실리적 관계라는 대표적 근거는 냉전기 북·중 관계가 1956년 8월 종파사건, 소련에 대한 인식차이, 베트남 지원문제, 문화대혁명 시기의 이념갈등,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일정 정도의 갈등과 반목관계를 경험해왔기 때문임.
 - 중국의 내정간섭을 우려한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당·정·군 내 연안계를 숙청함으로써 중국의 국내 간섭을 배제하고, 주체노선을 표방했으며, 이 결과 1958년 북한 주둔 중국군이 철수하게 됨.
 - 소련 브레즈네프 노선을 중국은 소련이 수정주의 노선을 고집할 것이라 본 반면, 북한은 전향적으로 평가했으며, 베트남 지원을 위한 사회주의권 공조에 대해서도 중국은 소련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북한과 노선 갈등을 일으킴.
 - 문화대혁명 시기 북한과 소련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과 북한은 상호비방전을 악화시켰으며,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의 결정에 대해서도 북한은 중국을 수정주의자, 변절자로 비방.
-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북한의 강대국 편승을 방지하거나, 북한의 중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음.
- 북·중 우호협력조약은 195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 간 데탕트(détente)와 중국과 소련 간의 이념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단독으로 맞서야 할 뿐 아니라, 소련의 위협에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체결된 것임.
 -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대만 등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중국 주변부 국가들과의 동맹을 유지해왔고, 베트남 디엠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북한은 최소한의 완충지대로 그 전략적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²⁾
 - 중·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역시 중국의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약이라는 틀로 북한의 행보를 관리하려는 측면이 있었음.
- 1960년대 후반 중·소 갈등이 국경무력 충돌로까지 악화되면서, 소

련의 위협에 대한 대처로 중국은 미국과의 화해무드를 조성했고, 당시 악화되었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함.

- 이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북한이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연대로 자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 차원임.
-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 실질적 안보보장을 통해 알바니아,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중국을 비판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지지를 이끌어냄.

나. 탈냉전과 북·중 가상동맹

- 문화혁명의 혼란을 극복한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전략을 구사함. 이는 이데올로기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함.
 - 덩샤오핑(鄧小平)을 위시한 중국 개혁그룹의 개혁개방 정책은 자력갱생과 계획경제의 모순을 인정하고, 대외개방과 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었음.
 -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선부론’ 등은 중국이 향후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고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음.
-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이라는 대외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 소련과의 분쟁 종식을 견인함. 비록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약간의 굴곡이 있었지만, 중국은 오히려 적극적인 시장개혁과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미국(서방국가)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도모함.
- 소련이라는 주변강대국의 위협지수 감소,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환경변화는 중국에게 북한의 안보 전략적 자산가치를 하락시킴. 북한 역시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에 대한 거리를 둔 접근을 함으로써 북·중동맹의 균열이 야기됨.
- 결정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 카드를 선택하면서 북·중동맹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평가를 받음.
 -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위기로 판단하고, 중국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친선관계를 확대시키려 했으나 중국은 이념보다는 실리를 위해 한·중 수교를 선택함.
 - 북·중 지도부의 상호방문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북한은 일방적으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위기로 판단하고, 중국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친선관계를 확대시키려 했으나 중국은 이념보다는 실리를 위해 한·중 수교를 선택해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북한과의 경제관계에도
적용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침체와
고난의 행군시기를
앞당겨... 그 결과,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으며, 북한은
동맹에 기댄 안보 대신
자주적 안보를
천명하면서 본격적
핵개발을 상황
돌파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해**

로 정전위원회 중국 대표단 철수를 요구함.

-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북한과의 경제관계에도 적용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침체와 고난의 행군시기를 앞당겼음.
 - 중국은 양국 무역에서 국제가격의 절반 이하로 물품을 공급하는 우호가격제와 구상무역을 철폐하고 현금결제 방식을 요구했으며, 거래단위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시켜 정상적 무역관계를 강조함.
- 그 결과,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으며, 북한은 동맹에 기댄 안보 대신 자주적 안보를 천명하면서 본격적 핵개발을 상황 돌파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함.
- 북한의 핵개발 등 공세적 행보가 지속되자, 북·중 우호조약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조약의 제2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등으로 미국 등이 군사행동을 나설 때, 중국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즉각 대북 군사지원을 나서야 하나, 미국과의 협력구도 속에서 전면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것은 중국의 실정과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
 - 조약의 제4조 상호협회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국 공동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국제문제에 관해 협의를 해야 하나, 핵개발처럼 중대한 사항에 대해 북한이 중국과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중국 역시도 북한과의 협의 없이 1992년 한국과 전격 수교를 맺었음.³⁾
- 다수의 학자들은 북·중 관계가 혈맹관계로부터 벗어나 정상국가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함.
 - 북·중 우호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북·중동맹은 가상동맹(virtual alliance)에 불과함.⁴⁾
 - 북한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한반도 핵위기가 고조되자, 중국 내 일부 학자들이 북·중조약의 자동개입 조항 삭제 견해를 제기하기도 함.⁵⁾
-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로 판단했으며, 이념적 기준보다는 실리적 기준에 근거해 관계를 설정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북·중동맹의 동학은 20세기 말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됨.

3. 미·중 전략게임과 북한의 재발견

-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짐이 증가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고려하게 됨.
 - 1997년 미일 양국이 동북아 유사 시 양국 간 공동대처를 명시한 신 방위지침(defense guideline)에 합의하고, 이듬해 미국 주도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일본이 동의함으로써 대중국 견제 움직임이 명확해짐.
 - 1999년 코소보 전쟁 과정에서 미군의 중국대사관 오폭과 미 의회가 제기한 중국의 핵기술 도난 의혹 등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우려를 야기함.

- 설상가상으로 2001년 미국 부시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각 지역에 대해 공세적인 외교를 단행, 중국의 안보위협이 증가되었음.
 - 클린턴정부 때는 미·일동맹의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여 불안정하나마 동아시아에서의 균형이 잡혔으나. 부시행정부는 불안한 균형을 완전히 깨.
 -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간전쟁 및 이라크전쟁을 치르면서 중동, 서남아, 중앙아, 동남아 등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 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세계에 재확신 시킴과 동시에, 중국의 잠재적 도전에 대한 봉쇄를 본격화함.

- 이에 반해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주변부의 안정이 국가의 최상목표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려 했음.
 - 중국의 입장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월한 미국과의 패권경쟁은 승산이 희박할 뿐 아니라,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중국 위협론을 확대시킬 수 있었음.
 - 중국은 미국을 지역 내 관리자로서 인정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변부 국가들에게는 선린우호정책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최소화하려 함.
 - 2002년 후진타오 정부는 평화로운 중국의 부상 혹은 평화를 존중하는 발전을 강조하는 ‘평화굴기’, ‘평화발전론’을 내세움.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로 판단했으며,
이념적 기준보다는
실리적 기준에 근거해
관계를 설정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짐이
증가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고려하게 돼*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 중국은 이후에 발생한 북핵 위기에 대해서도 미·중 협력구도에 대한 희망과 미국의 봉쇄에 대한 견제라는 양 측면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진행해

-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한 대응과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적극적인 다자 및 주변부외교를 진행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동맹과 패권기제를 대항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
 - 중국은 미국 외의 강대국인 러시아, 프랑스 등 개별 국가뿐 아니라 EU와의 관계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였으며, 주변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역할 확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결성 등을 주도함.
- 중국의 전략적 이해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다자 및 주변부 외교 강화는 한편으로는 아시아와 국제사회에 대한 재확신을 통해 중국 부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측면이 존재함.
-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함.
 - 당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내부 자원 고갈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2001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이해의 일치를 봄.
- 중국은 이후에 발생한 북핵 위기에 대해서도 미·중 협력구도에 대한 희망과 미국의 봉쇄에 대한 견제라는 양 측면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진행했으며, 미국의 강경한 대응과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경향이 강함.⁶⁾
 -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전 등으로 선제공격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과도한 개입을 막으려고 중국이 북핵문제에 중재 역할을 한 측면이 존재.
 - 중국이 미국과의 협조 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무력제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줄곧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

-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드파워의 극단적 사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기를 실추시키는 동안, 중국은 다자주의 확대와 평화강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지원 등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함. 중국이 새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된 반면, 미국이 생각만큼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힘의 균형추가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함.
- 2007년 미국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절대적 패권과 헤게모니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세계 국제질서에서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게 됨.
-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과학 기술, 소프트파워 등 종합국력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을 당분간 따라잡기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G2 체제는 객관화되고 있으며, 중국 주변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위협이 되었음.
-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군철수를 주도하는 등 미국의 영향력을 후퇴시켰으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으로 중국과 아세안과의 우호협력관계가 확대되었음. 또한 급증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경제에 대한 상호의존도가 급속하게 높아졌으며, 한국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한중관계의 전방위적 확대 현상들이 포착되었음.
- 중국이 해양이익의 수호를 위한 군사혁신과 해·공군력 강화 등 종합국력 증강 목표를 통해 역내 이익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들이 포착되었음.
 - 중국은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양안의 경제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등 급격한 군사 현대화를 추진.⁷⁾
 - 중국은 정밀유도 탄도미사일과 대함 탄도미사일(ASBM) 개발을 진행해오는 등, 미국을 대상으로 한 반접근전략(anti-access strategy)에 기반한 군사적 혁신을 단행.⁸⁾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과학 기술, 소프트파워 등 종합국력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을 당분간 따라잡기 힘들다고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G2 체제는 객관화되고 있으며, 중국 주변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위협이 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세력
약화는 동아시아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야기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익중첩
(intersection)영역이
확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재관리를
야기해**

-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해양 방어선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양 권익을 대만, 티베트에 이어 ‘핵심 국가이익’이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의도를 표출함(2010.3).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세력 약화는 동아시아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야기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익중첩(intersection) 영역이 확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재관리를 야기함.
-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도전국가로 간주하고 관여(engagement)정책과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reassurance)전략의 확대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함.
 - 미국은 중국을 국제경제로의 통합을 허용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관리정책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욕구를 줄이려 함.
 - 자국의 군사력과 군사기지 체제 강화,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 재확인 및 군사적 보장 제공,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동아시아 다자기제에 대한 적극 참여 의지를 표방.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군사교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의 반발로 철수했던 미군을 2009년 이후 재배치함.
 - 2010년 미국의 이라크 주둔군 철수를 계기로, 미국의 해양 군사력을 강화를 재모색.
-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0년 미·중 관계는 상호갈등이 심화되었음.
 - 2010년 초반부터 미·중 양국 간에는 대만 무기 수출 문제(1월), 달라이라마의 백악관 면담(2.18),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9~11월) 등으로 갈등이 부각되었음.
 - 중국이 대만, 티베트·신장 위구르 문제에 이어 남중국해를 3대 핵심이익이라고 주장(3월)한 데 대해 미국이 비판(7.23)을 가하면서 양국관계는 급랭함.
 - 이란 핵문제 및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제재에 있어서도 중국은 비협조적 태도를 견지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한 이의제기, 군사적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 훈련 맞대응 등 대결적 자세를 보여

주었음.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중국의 남중국해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경고, 대만 군사장비 수출 승인, 일본과의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갈등, 더 나아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환울전쟁, 류사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안보프레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이해하게 됨.
-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안보프레임 틀 속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정치·경제적 재보장(reassurance)을 시도하게 됨.
 - 2010년 5월 이래 김정일의 전격적 방중이 3차례나 승인되었으며(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 이 밖에도 북한 노동당 창당 65주년, 한국전쟁 참전 60주년(2010), 중국 공산당 창건 70돌, 북·중 우호조약 50주년(2011) 등을 맞아 양국의 고위층 교류를 대폭 확대.
 - 김정은이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유력한 계승자로 등장한 이후, 후진타오 등 중국 국가 지도자들은 “북한의 새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히는 등, 양국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
 -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과 라선개발의 연동, 황금평·위화도 개발,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및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본격화됨.
- 이번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일을 전후에서 중국의 전략적 재보장 현상이 재차 반복되었음.
 - 중국의 CCTV(2011.7.11)를 통해 북·중 우호협력조약이 2021년까지 유효하다고 보도함에 따라 지난 20년가량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조약이 여전히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⁹⁾
 - 북·중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해군훈련함대 소속 정허(鄭和)호와 뤼양(洛陽)호가 북한 원산항에 입항(2011.7.4)했으며, 이는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벤트임.¹⁰⁾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일을 전후에서 중국의 전략적 재보장 현상이 재차 반복돼… 중국의 CCTV를 통해 북·중 우호협력조약이 2021년까지 유효하다고 보도함에 따라 지난 20년가량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조약이 여전히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

중국의 기본 대외전략의 변화가 있거나, 현재의 동북아에서 현재의 세력 균형구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의 북·중동맹 체제에 대한 포기는 쉽지 않을 것... 중국이 실리적 이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다는 점에서 북·중동맹의 견고성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어

4. 북·중동맹은 과연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 중국의 국가전략의 최대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그 다음은 이를 위한 주변환경의 평화와 안정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구도 역시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도가 한미, 미일의 동맹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어 불균형화 되는 것을 원치 않음.
- 중국의 기본 대외전략의 변화가 있거나, 현재의 동북아에서 현재의 세력균형구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의 북·중동맹 체제에 대한 포기는 쉽지 않을 것임.
- 중국이 실리적 이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다는 점에서 북·중동맹의 견고성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음.
-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임.
 - 김정일은 최근 3차례의 방중을 통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신형전투기 등 무기지원을 요구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이 핵개발과 긴장조성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중국은 북핵 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2011.6).
- 경제협력 역시 북한과 중국 간의 이해의 편차 때문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중국은 나선 개발을 통해 장길도개발과 연계와 항구의 확보를 선호하고 있지만, 북한은 황금평개발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중국은 북·중경협에 있어 여전히 시장논리를 강조하고 있음.
 - 더구나 광물자원 중심의 북·중 교역 확대는 북한의 귀중한 자원을 유출시키는 비효율적 구도임.
-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까지, 북한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북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6자회담을 재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여야 함.¹¹⁾

- 북한은 안보 딜레마와 후계구축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일한 전략카드인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식 개혁개방도 체제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
 - 김정일 위원장의 1차 방중(2010.5.5)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5.12)을 통해 ‘자체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대내외에 발표함으로써, 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의도를 견제.
 -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은 핵 포기 국가에 대한 미국 및 서방의 용이한 군사개입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핵 보유 야욕을 지속시킬 것으로 판단됨.
 - 세습승계 자체가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때,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정책과 노선에서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투자와 경제협력을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
- 중국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여 정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나아가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안정과 중국의 내정간섭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일시적으로 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제스처를 보일지는 몰라도, 과거의 양국관계의 경험과 북한 체제의 속성상 중국의 궁극적인 이해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임.
-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관계의 하위 문제로 인식하는바,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구도가 갈등구도보다 확대된다면, 북·중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갈등과 중국 위협론 확산에 대한 부담론이 제기되었음.
 - 12·5 경제계획의 추진 등 경제 전략의 대전환 과정에서 외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은 경제발전에 득이 없다는 반성이 있었음.
 - 중국 외교부도 ‘평화로운 발전 추구의 길’과 협력외교의 입장을 강조함(중국 외교의 수장인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추이텐카이 외교부부장 란팅포럼 발언 등).¹²⁾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까지,
북한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북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6자회담을
재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해야**

고무적인 상황은 중국이 2010년의 경험으로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의 결과로 연평도 포격 이후 갈등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에 영향력 행사, 올해 김정일 방중에 대한 이례적인 사전설명, 한·중 국방전략 대화확대 등이 나타나

- 중국은 2010년 미국과의 대립구도 지속에 따른 부담으로 협력관계 복원을 기대했으며, 미·중정상회담(2011.1.20)을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공감대 형성.

5. 정책제언

-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게임에서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절대 아님. 북·중동맹 관계의 강화는 한국의 대북한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진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북·중동맹관계의 전략적 편차가 존재하고, 균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
 - 중국의 북한 제재와 강압책은 북한 불안정과 혼란문제로 부담이 존재하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이해를 구축할 수 있음.
 - 북핵문제에 집중,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를 유지하고, 6자 회담 재개 카드를 통해 중국이 북한 핵실험 자제와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 조치 유도를 설득.
- 고무적인 상황은 중국이 2010년의 경험으로 한·중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의 결과로 연평도 포격 이후 갈등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에 영향력 행사, 올해 김정일 방중에 대한 이례적인 사전설명, 한·중 국방전략 대화확대(2011.7.27) 등이 나타남.
- 우선적으로 연미통중(聯美通中)을 실현하고 단계적으로 연미협중(聯美協中)을 달성해야 함과 동시에,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를 조화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한·미동맹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나, 중국에게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편승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미국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함.
 - 북·중경협 확대 등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변화 유도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배타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동북 4성론의 확대 해석이나 중국과의 불필요한 민족 감정 갈등은 지양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 기회론 혹은 이용론으로 활용할 전략 구축 필요.

-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도에서 판단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전반적 틀을 바꾸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개선도 이러한 틀을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나, 선부른 접근은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현상타파보다는 균형유지의 틀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기제의 확대를 통해 중국에게는 미국의 안보위협 축소, 주변국들에게 중국 위협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하는 노력 지속 필요.
 -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적극 추진 등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경제 의존성을 더욱 확대시켜, 역내에서 북한의 모험주의 노선에 따른 공동의 위협비용부담을 제고시킴.
 - 아세안,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중국 주변국들과의 외교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동 견제전략도 동시에 개발할 필요 있음.

-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한국과의 수교 직후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사실상 파기하면서 남한 쪽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한국의 자본을 희망하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양국 간의 갈등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전략적 신뢰관계의 균열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음.
 - 중국의 대북영향력 강화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러시아는 확실히 유용한 카드임.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도에서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전반적 틀을 바꾸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이기현

現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중국 베이징대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주요경력으로는 시사저널 베이징 통신원,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 연구분야는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와 토지정치, 한반도와 중국관계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중국 전환기 국가성격에 대한 재고찰’, ‘중국 농민저항과 국가-사회관계의 새로운 조정’,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등이 있음.

주석

-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 정식명칭임.
- 2) 북한의 입장에서도 1961년 5·16 쿠데타로 등극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인정, 한미동맹의 강화 유지에 대한 부담으로 후견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박창희, “지정학적 이익변화와 북·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113 (봄), 2007, p.35.
- 3) 당시 중국은 북한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이는 협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음.
- 4)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Vol. 102, No. 665, Sep. 2003.
- 5) 대표적 학자로 중국사회과학원의 선지루(沈驥如) 교수가 있음. 沈驥如, “维护东北亚安全的当务之急: 制止朝核问题上的危险博弈.” 『世界经济与政治』 2003年 9月; 실제 중국의 군사대표단이 동 조약의 상호원조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이 논의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국제위기감시기구, 『중국과 북한: 영원한 동지인가?』,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아시아 보고서 No. 112 (2006.2.1), p.24.
- 6) 이러한 견해는 Daug Bandow, “Enlisting China to Stop a Nuclear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8(4), 2006, pp.73-93.
- 7) 중국은 아직 미국과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피하고 있지만 최근 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특히 비대칭적 군사력 증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함.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는 “중국의 군사 안보 발전 평가 연례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음.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 8) 중국의 반접근 전략에 기반한 군사적 혁신에 대한 주장은 Thomas Mahnken, “China’s Anti-Access Strategy in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34, No.3, June 2011.
- 9)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가 달성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이때까지 북한을 안고 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희옥 교수는 해석함. 이희옥, “북·중 우호협력조약 50년.” 국민일보 칼럼(2011.7.12).
- 10) 미국 역시도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 기념일 당일 동맹국인 한국 부산에 정박한 핵잠수함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보냄. 북·중동맹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무력시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 텍사스호는 베이징, 평양까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장착되었으며, 핵 잠수함을 언론에 공개한 시점과 최신 전략 군함의 공개가 최초라는 점 때문임.
- 11) 중국 지도부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기대한다면,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함. Zhu Feng, “The Dear Leader’s China Trip: Rift Failed to Cover.” *Asia Security Initiative*, May 11, 2010.
- 12) 戴秉国, “坚持走和平发展道路.” <http://www.chinanews.com/gn/2010/12-07/2704984.shtml>; 蓝厅论坛 崔天凯就新时期中美关系发表主旨演讲, http://www.tianjinwe.com/tianjin/tbbd/201101/t20110114_3178777.html

JPI 정책포럼 현황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중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흥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흥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